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 5. 21.] [조례 제3576호, 2023. 11. 2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064-750-7956



제57조(감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18.11.21., 2022.11.23.>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③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1만㎡/일 이상)의 주변지역으로 도지사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마을에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거주자들에 한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피해 정도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30~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22.11.23., 2023. 11.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료를 경감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경감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신설 2023. 11. 20.>

⑤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8.11.21., 2022.11.23., 2023. 11. 20.>

⑥ 제주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5퍼센트까지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보전하여야 한다.<개정 2017.3.29., 2022.11.23., 2023. 11. 20.>

⑦ 제6항에 따라 경감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 준공일까지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투자사항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감면액 납부 시까지 공공하수도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11.23., 2023. 11.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646호, 2023. 8.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보건복지부(자활정책과-자활지원), 044-202-3072, 307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써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